

“국가 차원의 먹거리정책 급하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먹고
영양부족과 과잉현상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식생활.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식사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국민영양문제를 다룰
국가차원의 먹거리정책이 시급하다



李光榮

〈한국일보 부국장/본지 편집위원〉

먹거리 만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풍요로 움 속에 먹거리의 심각한 현실을 잊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과 함께 먹거리 안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풍요 속에 국민은 물론 정책 당국도 안일한 태도다.

간 비료사용량이 9배나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설명된다. 품종개량도 한몫 했지만 이는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다. 생태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곡물은 대체로 비축량이 60일분 이하로 떨어지면 값이 불안해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 66일분의 비축량이 있지만 이는 87년 1백2일분에 비해 36일분이 줄어든 양이다. 90년 풍년이 들었는데도 4년만에 이토록 크게 비축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류의 먹거리 문제가 머지않아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8일 월드워치 인스티튜트는 세계 곡물재고량이 95년말 기준 예상치 2억9천4백만톤에서 96년말에는 2억5천 8백만톤이 되어 비축량은 53일분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여년동안 세계 먹거리 사정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다. 1989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36억톤 정도로 절대량으로 보아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91년 현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66일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이 이월되어 비축된 상태이다.

90년 곡물 생산량도 3.2%의 증산을 나타내 87, 88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수치이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인구 10%에 해당하는 5억의 사람들이 먹거리의 절대부족증에 걸려 있고 이의 10%인 5천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는 분배의 문제이자 생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곡물 비축량 현재 66일분

그러나 인류의 먹거리 수급전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곡물 생산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 잡을 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토양의 생산성 저하로 앞날이 대단히 어둡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84년 사이의 곡물 생산량 증가는 주로 화학 비료와 농약 덕분이었다. 이는 같은 기

토양의 산성화와 염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담수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해서 농지 또한 점차 줄고 있다. 여기에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 하곤 경제성이 맞지 않아 농사일을 하지 않게 되어 곡물 생산량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 먹거리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양과 질병 고려한 대책을

한편 식생활과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영양결핍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요즘

엔 편식과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아 세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진 여러 나라가 영양과 질병의 관계를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부터다.

선진국들은 먹거리 사정이 나아지면서 과식이 보편화되었고 동물성식품을 편식하는 식생활형태로 바뀌어 감에 따라 비만, 순환기질환, 당뇨병, 암 등 이른바 성인병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성인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하더라도 좀처럼 완쾌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기 때문에 의료비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의료 보험이 과산상태로 빠져들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성인병의 원인규명에 나섰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렀다. 그래서 1968년에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발표한 '국가 식이(食餌)에 관한 의학적 관점' (Medical viewpoints on the national diet in Scandinavian countries)이란 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통해 성인병은 먹거리형태로부터 온 식원병(食源病)이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1975년 11월 '노르웨이 영양과 식품정책' (On Norwegian nutrition and food policy)이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국회로부터 인준을 얻어냈다. 노르웨이는 이에 따라 최초로 지방의 섭취를 총 섭취열량중 35%로 낮추고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높이도록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1977년 2월 상원에서 '미국 식사목표' (Dietary goals for the

United States)라는 이른바 맥거번보고서를 공포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어 '영양과 건강 : 미국인 식사지침' (Nutrition and your health : Dietary guide for Americans)을 발표했고, 1983년 2월 식사지침 자문위원회 (Dietary Guideline Advisory Committee)를 두어 식사지침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1985년 원안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되 보다 넓은 해석을 첨부한 형태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먹거리 문제는 직접적인 의료비의 부담 외에도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2천5백만 명이 고혈압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고 5백만명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암은 75~85% 정도가 생활환경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의 상당수가 식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조식이 위암, 동물성기름기의 과다섭취는 유방암, 섬유질을 적게 섭취했을 때는 직장암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어난다. 미국암협회 (ACS)가 미국인의 암예방식단은 말할 것 없고 한국인을 포함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암예방식단까지 만들어 계몽하고 있다. 미국이 식생활개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일본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1952년 영양개선법을 제정한 이래 미국의 맥거번보고서에 자극을 받아 1977년 식사목표를 정했고 이어 1980년 일본형 식생활기준을 공포, 정부 차원서 영양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식생활 환경이 나아지면서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고혈압,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이른바 성인병이 크게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었다.

영양부족·과잉의 모순 시정

우리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식생활 환경과 국민건강의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욱 심각한 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데다 많은 발효음식을 즐겨 먹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 계층은 영양권 장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영양의 과다와 편중으로 해서 선진국형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부족과 과잉이 공존하는 우리의 이같은 모순된 현실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저하는 말할 것 없고 먹거리 경제의 혼란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 결과적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 식사지침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국민 영양문제를 디룰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잘 것이 없다. 먹거리 정책을 속히 국민영양경제 차원에서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국민영양경제 차원이란 우리 땅에서 나는 농축산물의 소출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체질, 우리의 문화에 맞는 고유한 우리의 먹거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의 먹거리문화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먹거리 영양경제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있어야 겠다. ST